
「2020-4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6. 24.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20년 2분기)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대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2. 재정 (2P)	•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지자체 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 지방재정정책 대응전략	기획재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예산·재정 관련법령 (3P)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4~7P)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재산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준다)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 분석과 시사점 •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체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 예기치 않은 위기의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강원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8~10P)	• 2021년도 예산 요구(부처) 현황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 •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 강원도형 그린뉴딜 국회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20년 2분기)

현대경제연구원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 ① 미국 ⇒ Recovery v.s. Second Wave : 1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경제활동 재개로 실물지표 소폭 개선
- ② 유로존 ⇒ Deepening Recession : 주요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감소로 유럽 전역에서 경기침체 진행
- ③ 일본 ⇒ Worse than Recession : 실물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경기선행 지수가 급락하는 등 경기 침체 심화
- ④ 중국 ⇒ Still Bleak :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3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 ① L(lockdown)과 R(reopen)의 딜레마 : 경기 충격에 대응하는 부양책 효과의 기대감이 있지만,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은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봉쇄(lockdown)와 재개(reopen)가 반복되는 딜레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 ②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이슈,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간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이며,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③ 부상하는 신흥국 리스크 : 최근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물경제 및 금융불안 등 리스크로 인해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바로가기](#)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확정,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

기획재정부

목표		코로나19 국난 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3 + 3 정책	코로나19 국난 극복			
	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③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용유지 및 안정화	◦소비진작 및 관광회복 ◦대대적 투자 활성화 ◦수출력 견지 및 보강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 최소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⑤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한국판뉴딜 본격 추진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 체질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바로가기](#)

02	재정	출처
	■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6.3.의결, 제29회 임시국무회의) - (추경목적)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 (추경규모) 35.3조원 ⇐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 (재원조달) 지출구조조정 10.1조원 + 국채발행 23.8조원 + 기금 자체재원 활용 1.4조원 - (주요내용) ① 세입경정을 통한 세수감소분(성장률 하락, 세제감면 등) 보전 11.4조원 ② 위기기업·일자리 금융지원 5조원 ③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경기보강 패키지 11.3조원 바로가기 ■ 지자체 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개선방안 - (필요성) 고령화, 인구감소 및 지역산업 쇠퇴 등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작용을 통한 공동참여과정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관리체계 필요 - (현황) 중앙-지방 간 또는 지자체 간 재정협력을 지원하는 법령을 보면, 구체적인 재정협력의 재원에 관한 내용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중앙부처 재정지원과 지자체 자체재원에 기반한 재정협력 활성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 간 협력체계 지원조항 신설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새로운 협력체계 시범사업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활용한 지방 간 협력체계 재정지원 활성화, 「(가칭)지역개발 및 지방 간 협력체계 특별법」 제정, 목적세 시설 또는 현행 목적세를 확대 개편한 재정협력 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음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지방재정정책 대응전략 - (지역경제 전망) 2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섯다운에 의한 내수침체와 수출둔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분기보다 악화되고, 경제회복 양상은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양상에 좌우될 것임 -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한국경제가 ‘V자형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야 할 시점으로, 내수시장 자극에 효과적인 재정사업 위주로 세출구조조정 실시, 전 영역에 걸쳐 Fast Track 제도의 확대 실시, 지방채무 발행 등 확장적 지방재정정책 등을 들 수 있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6.2.) -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환급을 추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6.2.)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감면의 제한기준으로서 국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 국세감면액 총액에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지방소비세 배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에도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액을 포함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개정·시행 '20.6.9.)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 이체·이용·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도입) NABO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제20대 국회의 입법 동향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6대 핵심 조세이슈를 선정하고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함
- (주요 조세이슈별 쟁점)
 - ① 디지털 경제와 기업과세 : 고정사업장 기반 전통적 법인과세 방식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에 한계 발생 ⇒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조세정책 대응 필요
 - ②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과세 : 전통적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플랫폼 기반 고용형태(자영자) 등 비정형 노동의 증가로, 두 고용형태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존재 ⇒ 과세형평성 확보 필요
 - ③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 : 가상화폐 등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등장은 현행 조세법령 및 규제 사각지대를 야기 ⇒ 전통적 경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세입기반 확보를 위한 과세방안 마련
 - ④ 혁신성장 조세지원 : 첨단혁신기술(AI 등) 속도에 부합하는 조세지원 정책 필요
 - ⑤ 세무행정 디지털화 :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세원이동성 및 복잡성 증가로 세원포착 어려움 증대 ⇒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 필요
- (향후 정책과제) 노동형태 및 소득유형 간 과세형평성 확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대비,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기준 과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과세기반 마련 등임

 [바로가기](#)

■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배경)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 투입되어 왔던 대규모 저출산 대응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
 - (주요내용) 2019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2006년 대비 15배 증가한 32.4조원으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
 -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에 비해서도 1%p 낮음
 - 가족관련 공공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었고, 서비스는 평균 수준을 상회함
 - (시사점)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어,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예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현금지출 확대, 보육·돌봄 서비스 정비·가족 돌봄시간 보장 등 서비스 내실화

 [바로가기](#)

■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재산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준다)

*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재산부)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추진 중인 5대 신산업 중 하나임

-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문제,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로 일반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8.12.4.)되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위탁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간 공유재산 실태조사 표준안 마련, 온라인 공유재산 업무정보방 운영,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워크숍 주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옴
- 현재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군 일반재산의 무단 점유 및 무단경작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의 행정 조치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 더 많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 부담은 덜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바로가기](#)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 분석과 시사점

-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수는 22.0%, 중학생 수는 33.5%, 고등학생 수는 21.9%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내국세 연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세입 규모 59.2% 증가,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5% 증가)
-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입의 지속적 증가는 지출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으로 이어져, 세부 사업별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됨
-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지출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할 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세부사업을 도출해 봄

【 지방교육재정 지출구조 분석 】

분석 항목	분석 내용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성적 탄력적* 평가	146개 세부사업 중 고탄력·저탄력·비탄력사업 파악 - 고탄력 27개, 저탄력 71개, 비탄력 48개
학생 수 감소와 예산증감률 간의 정량적 관계 분석	세부사업의 예산증감률, 구간 범위의 적용

* 탄력성 개념: 예산항목과 학령인구 증감의 직·간접적인 연관성 정도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개요)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등을 확정함
- (경제운용 방향)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이다
- 세부적으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2020년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과 ‘6대 보장’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6대 보장’ 중 고용·민생·시장주체(기업) 보장을 강조함
-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는 ① 코로나19 방역 ② 3대 난제 해결 ③ 내수 확대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⑤ 혁신주도형 발전 ⑥ 시장화 개혁 ⑦ 지역 균형 발전 ⑧ 대외개방 확대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9대 중점업무’를 제시함
- (시사점)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96cc62f861fdd6e50510c0224a756dff_img.jpg\)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체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취약 노동자 : 초단시간, 일일단기,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 및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KLI 고용·노동브리프, ‘20.4월)에 따르면, 고용 취약 노동자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약 45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용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① 일자리 보존 대책 우선 추진 ②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제고 ③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고용유지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강조) ④ 노사의 사회적 책임

[!\[\]\(f95dab70c751fda7d824b8b03650f7aa_img.jpg\)바로가기](#)

한국노동연구원

■ 예기치 않은 위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정책 예산으로서의 신속한 대응 연계가 어렵고, 당해 예산은 이미 사용처가 결정되어 있어 재난 대비 여유재원 조성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 빈발하는 재난으로 가중되는 재난 복구비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지난 5월 의결된 지방재정법은 ‘통합재정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골자로, 운용 목적이 유사한 기존 통합재정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운영하되 계정의 분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 책무성 강화를 위해 회계와 기금 간, 상호 간 이체와 전용 등을 포함한 재원 운용의 효율화 지향, 기금운용에 따른 모니터링 요구
- 계속되는 산불, 코로나 사태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재개정 및 관련 기금의 정비(계정 구분, 운용 용도의 명확한 규정, 유사기금 정비 등)를 통해 새로운 재정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관련 기금 제정 현황 】

구분	통합 관리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	감채/ 지방채 상환기금	구분	통합 관리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	감채/ 지방채 상환기금
강원도	'17.12.29		'04.03.06 (지방채)	영월군		'19.09.06	
춘천시	'06.01.06			평창군	'09.06.19	'19.11.22	
원주시	'15.06.05			정선군			
강릉시				철원군		'19.11.11	'09.11.17 (지방채)
동해시	'16.10.10			화천군	'15.11.13	'19.09.20	
태백시			'12.08.03 (감채)	양구군		'19.09.30	
속초시	'20.05.08		'10.12.17 (감채)	인제군	'05.03.18	'17.07.14	
삼척시		'19.09.27		고성군		'19.11.14	
홍천군		'19.10.14		양양군	'10.11.15	'19.12.31	
횡성군	'19.11.28 (시행규칙)	'19.11.28 (시행규칙)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2021년도 예산 요구(부처) 현황

- 각 부처가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 지출 기준 542.9조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7조원 (6.0%) 증가함
- 주요 분야별 증액 규모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2.2%, 복지·고용 9.7%, R&D 9.4%, 환경 7.1%, 국방 6.0%, SOC 4.9% 등임

[!\[\]\(4cafc60cd39da821525d7c6589540296_img.jpg\)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2021년 국민참여예산은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40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전년 대비 사업 수는 63%, 요구금액은 100% 증가한 총 156개 사업에 5,323억원이 요구됨
- 국민참여예산의 주요 특징은 성범죄 예방, 재난·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되고, 청소년,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과, 미래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됨

[!\[\]\(8a8ea273bba45b658cf4779d37ab61e8_img.jpg\)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

-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40개를 선정함
- 코로나 영향으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22:1의 경쟁률 (전년도 5:1)을 기록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선정함
 - *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가치소비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건강식품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가족·개인 단위의 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함
- 분야별 선정 결과는 지역문화를 재조명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콘텐츠가 21%로 가장 많았고, 로컬푸드 20%, 지역기반제조 17%, 디지털 문화 체험 15%, 거점브랜드 14%, 스마트관광 9%, 자연친화활동 4% 순임
- 주요 분야별 사례로는 '창신동 패션타운 재생', '순천만 갈대 업사이클', '의성 폐공장을 활용한 낙차식 수경재배', '제주 해녀의 부엌', '나로호 우주센터의 유아전용 콘텐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제들이 선정됨
-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는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07e95c4c760ed8b72579d140ce510c89_img.jpg\)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에 따라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계획임
- 지난 6.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수소 선도도시」, 「시흥-무인이동체 거점도시」 등 3개 지역 8개 지구에 총 9,951km²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함
- 금번 추가 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총 8.3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한 「광양만권 울촌3산단」 지구(9.76km²)는 지정 해제됨

[!\[\]\(30072721fe92392a2d7c953be68f714a_img.jpg\) 바로가기](#)

■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함

< 2019년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개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개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개



< 2020년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등 6개
계획성	20%	3개(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 (제도개편 내용)

- ① 평가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함
- ②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함
- ③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 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④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됨

[!\[\]\(19fdbd6eaa1508fb9caf367b7a64e245_img.jpg\) 바로가기](#)

■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 그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민생안정·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실물피해·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해 왔음
- 코로나로 인한 외출·소비자제, 관광객 감소 등이 지속되며 내수활력이 침체되면서 소비 촉진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대규모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소비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2,000개 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소비 촉진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할 계획임

【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요 】

- 행사일정: 2020. 6. 26.(금) ~ 7. 12.(일)
- 추진방향: “대형업체 자발적 할인+중소업체 판매 지원”
 - 행사현장-온라인 플랫폼 연계 ‘언택트’ 특별행사 개최
 - 4개 내외 권역별 현장행사 개최(먹거리불거라소비 결합 지역 축제성 행사)
- 참여업체: 2,000개 내외 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 등 참여

[!\[\]\(eaac180de418db4eae4b4cefebda75e8_img.jpg\)바로가기](#)

■ 강원도형 그린뉴딜 국회 포럼 개최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 강원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형 그린뉴딜 및 저탄소융합 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포럼(6.23. 국회의원회관)을 개최함
- 강원도는 탄소광물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형 석탄재 희토류 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석탄재에서 국가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강원도의 활용 방안과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함

[!\[\]\(43fda5baa5446493352974e4b4060607_img.jpg\)바로가기](#)